정부혁신 보다 나은 정부	보 도 자 료	작성과	주민등록번호 변경위원회 심사지원과
행정안전부	2019년 6월 11일(화) 조간 (6. 10. 12:00 이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과 장 구 상 사무관 구은정
		연락처	02-2100-4057 02-2100-4061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구성 다양화로 국민에게 다가갑니다

- 6월 11일, 「제2기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출범」 -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6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6명의 민간위원 위촉을 겸한 **제2기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한다.

○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이하 변경위원회)는 「**주민등록법**」 제7조의5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사·의결하기 위하여 설립된 **행정안전부 소속**의 위원회이다.

○ 새롭게 출범한 제2기 변경위원회는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인이 여성이 많은 점*을 고려하여 여성의 입장을 폭넓게 반영하기 위해 **여성위원을 대폭 확대**하였다.

* 1,582명의 변경신청자 중 남성 618명(39.1%), 여성 964명(60.9%)

○ 또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도록 **비수도권 위원** 및 **현장전문가**를 **적극적으로 위촉함**으로써 **성별·지역별·직능별 위원이 균형 있게 구성되어** 내실 있는 위원회 운영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 민간위원 구성인원(비율) >

구분	성별	지역별	직능별	비고
제2기	남 3, **여 3** **(여성 50%)**	수도권 4, 비수도권 2 (비수도권 33.3%)	학계 4, **전문가 2*** (전문가 33.3%)	*여성긴급전화1366센터 1, 변호사 1

□ 주민등록번호 부여(1968년) 이후 반세기만에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도입**된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는** 2년여 동안 **총 955명의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는 등 국민의 권리 구제에 앞장서왔다.

○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분들의 피해 유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보이스피싱 298건(31.2%), 신분도용 266건(27.9%), 가정폭력 203건(21.3%), 상해·협박 105건(11%), 성폭력 37건(3.9%),** 기타 46건(4.8%)순이었다.

○ **지역별** 현황을 살펴보면 **광역자치단체** 중에서는 **경기 234건(24.5%), 서울 224건(23.5%)** 등 수도권 지역이 가장 많았고, 제주가 7건(0.7%)으로 변경건수가 가장 적었다.

○ **성별** 현황을 살펴보면 남성 319명(33.4%), **여성 636명(66.6%)**으로 여성이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여성의 주요 피해사례는 보이스피싱 182명(28.6%), 가정폭력 176명(27.7%), 신분도용 128명(20.1%), 데이트폭력 등 상해·협박 89명(14%), 성폭력 37명(5.8%), 기타 24명(3.8%) 순이었다.

□ 변경위원회는 그간 제1기 성과를 바탕으로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제도 개선**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 이를 위해 변경위원회는 변경위원을 대상으로 한 워크숍, 정책연구용역 등을 통하여 주민등록번호 유출, 유출에 따른 피해 및 피해우려 범위 등 **판단의 이론적 근거를 구체화**하고 **세부 가이드라인을 체계화**할 예정이다.

○ 또한 **신청기관**을 주민등록지 읍면동에서 전국으로 **확대**, 법정 **처리기간**을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 **이의신청 불복절차**에 대한 **고지를 명확히** 하는 등 국민 편익증진을 위한 각종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 아울러 변경제도에 대한 인지도 제고를 위하여 경찰서 등 피해자 접점기관을 대상으로 변경제도 **맞춤형 홍보**를 실시함과 동시에 대국민 대상 **온·오프라인 홍보**를 병행할 예정이다.

□ **진영 행정안전부장관**은 “최근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데이터의 공유·활용과 함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라며, “이러한 추세에 부응하여 변경위원회가 최고의 **개인정보보호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활동과 참여**를 당부드린다.” 라고 말했다.

○ 이에 **홍준형 변경위원회 위원장**은 “변경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주민등록번호 변경**으로 **새 생명을 부여**받았다며 편지를 보내 감사함을 표시하신 분 덕분에 벅찬 감동을 받았다.”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위원회 운영**과 지속적인 **제도 개선** 등으로 변경위원회가 **소중한 개인정보를 지키는 파수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라고 하였다.

붙임 1 | **「제2기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출범식 계획**

◈ 주민등록법 제7조의5에 의거, 제1기 변경위원회 민간위원 임기 만료에 따라 제2기 민간위원을 균형 있게 구성·위촉하고, 제2기 변경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하고자 함

□ 개 요

○ 일 시 : 2019. 6. 11.(화) 15:30～16:00

* 출범식 후 정기회의 개최

○ 장 소 : 정부서울청사 12층 중회의실

○ 참 석 : 13명(행안부장관, 변경위원회 위원(11명), 지방자치분권실장)

○ 내 용 : 제2기 민간위원(6명) 위촉장 수여, 환담, 기념촬영

□ 세부계획

시 간			내 용	비 고
출범식	15:30~15:33	3′	◦ 개회 및 국민의례	사회:심사지원과장
	15:33~15:40	7′	**위촉장 수여**	행안부장관 친수
	15:40~15:43	3′	**장관 인사말씀**	행안부장관 * 좌석 착석
	15:43~15:45	2′	◦ 위원장 인사말씀	위원장
	15:45~15:55	10′	**환 담**	참석자 전원
	15:55~16:00	5′	**기념촬영**	참석자 전원 * 백드롭 전면
정기회의	16:10~18:00	120′	◦ 안건심의 및 의결	위원장, 위원

붙임 2 「제2기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위원 명단

□ 위원장

성 명	직위	비고
홍 준 형	· 현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 전 한국공법학회 회장 · 전 전자정부전문위원회 위원	<재위촉> '19.5.30

□ 상임위원

소 속	직 위	비 고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사무국장	<임명>

□ 민간위원

성 명	직위	비고
김 상 겸	· 현 동국대 법학과 교수 · 전 유럽헌법학회 회장 · 전 행안부 정보공개위원회 위원	<재위촉> '19.5.30
김 민 호	· 현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현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 · 현 개인정보보호법학회 회장	<재위촉> '19.5.30
김 유 진	· 현 법무법인 광장 소속 · 현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 · 사시 37회	<재위촉> '19.5.30
김 성 숙	· 현 여성긴급전화1366강원센터장 · 현 여성긴급전화1366센터전국협의회장	<신규위촉> '19.5.30
임 은 의	· 현 극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현 국가보훈처 정책평가위원	<신규위촉> '19.5.30

□ 정부위원

소 속	직 위	비 고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	<임명>
경찰청	정보화장비정책관	<임명>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기획단장	<임명>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조정관	<임명>

붙임 3 **변경신청 및 위원회 의결 현황 ('17.5.30.~'19.5.29.)**

□ 신청 현황

○ 신청사유별 현황

신청사유	합계	재산 피해 및 피해 우려				생명.신체 위해 및 위해 우려				
		소계	보이스 피싱	신분 도용	기타*	소계	가정 폭력	상해.협박	성폭력	기타**
신 청(건) (부분비중, %)	1,582	1,094 (100)	411 (37.6)	401 (36.7)	282 (25.8)	488 (100)	244 (50.0)	126 (26.0)	48 (9.8)	70 (14.3)
전체비중(%)	100	69.2	26.0	25.4	17.8	30.8	15.4	8.0	3.0	4.4

* 스미싱, 해킹 등 / ** 명예훼손, 학교폭력 등 취하 : 83건, 이의신청 : 29건

□ 위원회 의결 현황

심의결과	계	인용	기각	각하
의 결(건)	**1,396**	955	426	15
%	100	68.4	30.5	1.1

○ 지역별 현황

합계	소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955(건) (비중(%))	486 (50.1)	224 (23.4)	69 (7.2)	58 (6.1)	60 (6.3)	22 (2.3)	29 (3.0)	13 (1.4)	11 (1.2)	
	소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469 (49.1)	234 (24.5)	36 (3.8)	21 (2.2)	46 (4.8)	26 (2.7)	18 (1.9)	40 (4.2)	41 (4.3)	7 (0.7)

○ 성별 현황

심의결과	계	남성	여성
의 결(건)	**955**	319	636
%	100	33.4	66.6

○ 유형별 결정 현황

합계 (1,396)		재 산				생명·신체				
		소계	보이스 피싱	신분 도용	기타*	소계	가정 폭력	상해·협박 (데이트폭력)	성폭력	기타**
		980	**357**	**431**	**243**	**431**	**211**	**118**	**40**	**62**
인용(건) (비중(%))	**955** (68.4)	592 (61.3)	298 (83.4)	266 (72.8)	28 (11.5)	363 (84.2)	203 (96.2)	105 (89.0)	37 (92.5)	18 (29.0)
기각(건)	**426**	361	56	96	209	65	7	12	3	43
각하(건)	**15**	12	3	3	6	3	1	1	-	1

* 스미싱, 해킹 등 / ** 명예훼손, 학교폭력 등

붙임 4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운영 현황**

□ 추진배경 및 경과

○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감 해소** 및 **2차 피해 예방** 위해 변경제도 도입, **주민등록법** 개정('16.5.29.), 시행*('17.5.30.)

※ 헌재, "주민등록법이 번호변경 규정하지 않음은 헌법 불합치" 결정('15.12.)

*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출범(위원장 포함 11명[민간6, 정부5], 1사무국 1과 13명)

□ 주요내용

○ **(요건)**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생명·신체·재산 피해(우려)자**, ▸**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등의 피해자로서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피해(우려)자 (주민등록법 제7조의4)

* 유출 : 정보주체나 정보처리자의 관리·통제권을 벗어나 제3자가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상태(대법원 판례, 표준 개인정보보호지침)

○ **(내용)**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중 생년월일(6), 성별(1)을 제외한 **지역번호(4), 등록순서(1), 검증번호(1)** 변경



○ **(절차)**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번호변경 신청 → 행안부 주민등록번호 변경위원회 심사·의결 → 시장·군수·구청장이 변경(법정처리기한 : 6개월)

○ **(기존번호와의 연계)** ▸복지, 세금, 건강보험 등의 **행정(공공)기관*은 자동변경**, ▸은행·보험·통신 등 **민간기관** 및 주민등록번호 표기 **신분증**은 **직접 변경**

* 국세청(납세자관리), 행안부(지방세), 경찰청(신원조회) 등 17개 기관 연계처리

□ 추진 실적

○ **정례회의**(47회, 매월 2회)를 통해 총 **1,582건**의 **변경 신청** 건에 대해 **1,396건**(접수건의 88.2%) **심사·의결** 완료

- 인용 955건(68.4%), 기각 426건(30.5%), 각하 15건(1.1%)